

# “도서관 藏書확충이 시급하다”

전국도서관대회서 ‘당면문제와 개선방안’ 논의

## 관계법령 정비됐으나 아직 ‘출발점’

지난 87년 10월30일 도서관법이 개정된 데 이어, 그에 따른 시행령(88.8.16)과 시행규칙(89.3.25)도 마련됨으로써 도서관계의 숙원이던 일련의 관계법령 개정작업이 모두 끝났다. 그러나 우리 도서관의 현실은 시설·인원·장서 모두가 대부분 기준미달이거나 태부족한 실정이어서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 같다.

지난 11월2일~4일 포항공과대학에서 한국도서관협회(회장 이준희) 주최로 열린 제27회 전국도서관대회는 「새 도서관법에 따른 한국도서관의 당면한 제문제와 개선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대회에서는 한국도서관의 당면문제를 포괄적으로 제기한 鄭馳謨교수(중앙대 문현정보학과)의 기조연설에 이어 공공도서관(조원호·국립중앙도서관 열람과장)·대학도서관(손정표·경북대 도서관학과)·학교도서관(이규범·부산교육대)·전문도서관(최호남·한국과학기술원 도서과장) 등 館種別로 주제발표와 토의가 있었다.

## “도서관 전담기구 설치로 정책강화를”

최근 정부의 기구개편방침에 따라 ‘문화부’의 신설이 확정되면서 도서관행정 담당부서의 소속문제가 도서관계는 물론 교육·출판계의 관심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번 도서관대회에서도 예외없이 이 문제가 제기됐다.

정필모교수는 기조연설 첫머리에서, 도서관 행정부서가 문교부에 있는 경우와 문화부에 소속되는 경우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했다. 그는 현행대로 문교부에 소속될 경우, ①각급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교육적인 기능수행을 위한 도서관행정이 일원화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으며, ②도서관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설치의무 시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동안 문교부 소관의 전국 중고교 또는 대학도서관을 신속히 발전시켜 잠정적으로 공공도서관기능도 겸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었다. 반면 ①문교부의 관할범위가 너무 방대하고 교육현장에 관심을 치중하는 나머지 도서관정책이나 예산확보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많고, ②문교부의 도서관발전계획안이 너무 미온적이고 구태의연하여 현체제로는 도서관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했다.

한편 문화부에 소속될 경우의 장점으로는 ①현 문공부 산하 162개 지방문화원의 기능을 확대하여 공공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②문화부는 문교부에 비해 관할범위가 좁은 편으로 예산확보에도 유리할 뿐 아니라 도서관 행정부서 단위가 局으로 되어 문화부의 중심부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꼽았다. 반면, 도서관행정부서가 문화부에 소속된다 하더라도 각급학교의 도서관에 관한 행정은 문교부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도서관행정이 2원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정교수는 “행정부서를 도서관으로 승격, 확대하고 도서관정책을 적극 강화하지 않는 한, 행정부서는 문화부로 옮겨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교수는 또, 지난 65~73년에 걸친 편찬·배포되다가 슬며시 사라진 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협회 주최로 열린 제27회 전국도서관대회(11월2일~4일 포항공과대학)에서는 새 도서관법에 따른 한국도서관의 당면문제와 개선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의 ‘선정도서목록’ 사업을 부활시켜 중·고교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이 ‘선정도서목록’에 수록된 도서에 한해서만 구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으로써 도서관이 양질의 藏書를 구성, 양질의 봉사를 할 수 있음을 물론 출판계나 저작가들에게도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 “양질의 장서구성을 출판계에도 자극제”

장서의 확충문제는 학교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에서도 제기됐다.

우선 학교도서관의 설치현황을 보면, 전국의 초중고 10,545개교 가운데 57%에 불과한 6,055개교만이 도서관(실)을 설치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도서관은 도서실을 다른 용도와 겸용하고 있으며, 도서실 본래

의 목적에만 사용하고 있는 실질적인 전용도서실을 갖고 있는 학교는 고작 전체의 2.4%(251교)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대부분의 학교도서관이 형식적인 차례에 지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이규범교수는 “학교도서관은 학교의 교육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봉사기능 외에 도서 및 도서관의 이용 지도를 통해 학습방법을 배우는 등의 교육기능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따라서 도서실이 다른 용도에 겸용되거나 자료를 보관하는 방침으로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학교도서관의 장서현황도 빈약하기 짜이 없다.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규정된 학급당 비치도서수의 기준을 학생 1인당 도서수로 환산하면 평균 2.5권꼴로, 이는 미국이나 일본

**1개월만에 재판단행**

**컬러예화집**

**돈이 보낸 편지**

대한출판문화협회로부터 청소년 모범 도서로 선정된 양서

**이의용 지음**

眞實은  
단 한 마디의 말로도 전달될 수 있다.  
3분이면 읽을 수 있는 짧막한 예화들.  
예쁘고 재치있는 컬러삽화.  
짧고 쉽고 맑고 깊은 메시지 72편.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현대판 명심보감.  
독자대상: 7세 ~ 77세  
<2천8백원>

**도서출판 대림기획**  
100-193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286  
275-5296 · 6295

**이의용 에세이집**

**내 놀던 옛동산**

‘고향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  
그 그리움이란  
돈을 갖고 싶어하는 것과는 다른 것.  
그립지 않은 곳은 출생지일 뿐  
고향은 아니다.  
어머니와 고향을 가진 이는 행복하다.  
결론을 독자에게 유보하는  
참신한 수필 47편.  
<2천원>

**도서출판 대림기획**  
100-193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286  
275-5296 · 6295

**이의용 칼럼집**

**고독이라는 교만**

고독한 직장인들에게 주는 산업칼럼.  
그러나 그 고독은 독선에서 나온다.  
자기 중심적인 세계에는  
언제나 고독의 샘물이 고칠 수밖에 없다.  
기업, 사회, 직장인에게 주는  
<2천5백원>

275-5296 · 6295

# “도서관 업무를 문화부로 넘겨야”

出協 등 관련단체에서 要路에 건의

의 학생 1인당 10권 이상에 비해 형편없는 기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 1인당 장서량은 국민학교 2.1권, 중학교 1.9권, 고등학교 3.1권꼴로 평균 2.3권에 불과한 실정. 게다가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라야 국민학교 353원, 중학교 307원, 고등학교 688원으로, 평균 449원에 지나지 않아 학교도서관의 實體가 어떤 것인지를 짐작케 한다. 그뿐 아니라 유자격 司書교사도 초중고를 합쳐 겨우 828명에 불과한데, 이는 도서관수의 13.7%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이교수는 그 개선책으로 ①‘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규정된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을 지금보다 상향조정하고 ②사서교사의 승진제도 등 법적·행정적 유인체제를 강화하며 ③일본처럼 학교도서관법을 따로 제정, 학교도서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육성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의 내실화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손정표교수도 대학도서관의 장서확충이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현행 ‘대학설치기준령’은 4년제 대학의 경우, “학생정원 1인당 30권 또는 학과당 5천권 이상의 도서와 매년 학생정원 1인당 3권 이상” 및 “학과별로 10종 이상(자연계는 15종 이상)의 전문분야 정기간행물”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88년 3월말 현재 4년제 대학의 기본장서량은 학생 1인당 평균 26.3권으로 전체대학의 68.8%가 기준미달이며, 연차증가량도 학생 1인당 2.15권꼴로 전체의

74%가 기준미달이다. 또 정기간행물은 1개교당 평균 1,391종, 학생 1인당 0.16종으로 전체의 18.2%가 기준미달로 나타나 있다.

이는 일본이나 미국의 대학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준다. 일본(국립대학)의 경우, 85년 현재 학생 1인당 장서량은 평균 133.8권에 연차증가량은 4.9권꼴이며, 정기간행물은 1개교당 5,310종에 학생 1인당 1.12종꼴이다. 그러니까 학생 1인당 장서는 우리의 5배, 정기간행물은 우리의 7배가 되는 셈이다.

국내 4년제 대학도서관의 연간 자료구입예산액은 학생 1인당 국립대가 28,300원, 사립대는 22,520원꼴이며, 대학총예산액에 대한 자료구입비 비율은 대체로 국립대가 1.5%, 사립대는 1.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런 상태로는 대학도서관 장서의 연차증가량 및 정기간행물의 법정기준조차 갖추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손교수의 지적이다.

정필모교수는 “우리 국민들은 진정으로 양질의 도서관봉사를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현대와 같은 정보화사회에서도 도서관이 얼마나 절실하고 친근한 문화복지시설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학교에서의 컴퓨터교육설이 사실이라면, 차라리 그 예산으로 도서관시설을 하고 학생들에게 추천할 만한 양서를 다만 몇권이라도 더 구입하여 학생들에게 독서를 권장함으로써 그들이 충분한 지성과 정서를 함양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교육의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곡을 찌른 정교수의 이 말을 귀담아들을 만하다.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권병일)는 현재 문교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도서관 업무를 앞으로 신설되는 문화부로 이관, 도서관행정도 출판·저작권 등과 함께 문화부가 전담도록 해달라는 요지의 건의서를 지난 8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출협은 이 건의서에서 “도서관은 이제 사회교육의 범주를 넘어 지식과 정보, 여가, 문화봉사 등 다양한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문화부가 도서와 같은 문화매체의 생산·배포기능과 관계되는 출판·저작권 등의 업무와 도서관행정을 일괄해서 종합적인 국가문화정보정책을 관장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출협은, 새로 발족하는 문화부 내에 ‘출판·도서관국’을 두어 앞으로 전개될 정보사회에 중심역할을 출판문화와 도서관부문에 대한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정책 및 행정을 전담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전국도서관학과 학생연합회, 한국도서관학회(회장 최성진), 전국대학도서관학과장협의회(회장 정형우), 한국도서관협회(회장 이준희) 등도 도서관 업무의 문화부 이관에 대한 의견서 및 건의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한 바 있다.

출협이 건의서에서 밝힌 ‘도서관행정의 문화부 이관이 바람직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도서관은 이제 사회교육의 범주를 넘어 지식과 정보, 여가, 문화봉사 등 다양한 목적

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문화시설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문화부에서 도서와 같은 문화매체의 생산·배포기능과 관계되는 출판·저작권 등의 업무와 도서관 행정 등을 일괄해서 종합적인 국가문화정보정책을 관장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사료된다.

② 도서관 실태를 보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오늘날에도, 인구 25만명당 1개 공공도서관에 장서수도 인구 1인당 0.1책에 불과한 심히 열악한 독서환경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교부는 오로지 교육행정만을 전념토록 하고, 도서관행정은 문화부에 이관시켜 현재 문화공보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전국의 문화원과 도서관의 기능을 통합하여 균등한 문화향수 기회제공 및 국민교양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문화복지시설로서 도서관의 획기적인 육성·발전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도서관행정의 전담부서에 관해 출판문화계는 문화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여론이 절대적이며, 도서관에서도 81%가 이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나 있는 것으로 미루어, 도서관행정을 문화부가 담당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 人間과 權力

Helmut Schmidt著  
尹謹植外 2人共譯

(主要目次) 主要强大國들과의 共存·  
平和 그리고 개인적인 시대적 흐름의  
평가로 보여준 Helmut Schmidt의  
자서전이다.

## 征韓論의 背景과 影響

李炫熙 著

(主要目次) 근대일본의 한국침략과 그  
시각, 정한론에 이르는 일본의 침략책,  
정한론의 정체와 그 본질, 명치정부의  
재정조달과 사족계급, 일본의 문호개방과  
침략수법의 습득, 정한론의 침략적 의도,  
정한논쟁의 심층분석, 정한논쟁의 결과와  
일본의 정계.

## 韓國資本主義 成立史論

趙璣濬 著

(主要目次) 朝鮮後期社會의 性格,  
民族資本의 受難과 抵抗,  
開港과 經濟改革.

## 韓國資本主義 性格論爭

趙容範 外 共著

(主要目次) 西歐資本主義發達過程,  
近代社會의 性格糾明, 1945년 이후의  
사회의 性格糾明, 1946년 이후  
韓國社會의 性格.